

회색지대 속의 정의 담론

일시: 2021년 3월 23일(화)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

사회: 김범수(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발표: 유홍림(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장/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범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5차 평화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범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제5차 평화학 포럼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 유홍림 교수님을 모시고 회색지대 속의 정의담론이라는 주제로 일종의 대담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홍림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홍림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주로 서양정치사상사와 현대정치사상입니다. 서울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셨고 미국 럿거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저서로는 『현대 정치의 위기와 비전』 등이 있으며, “공화주의 전통의 현대적 의의”, “이사야 별린의 현실감각” 등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New Political Science 편집위원을 비롯해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유홍림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편안하게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유홍림: 오늘 평화학 포럼에 초대해주신 통일평화연구원의 임경훈 원장님, 김범수 부원장님, 그리고 평화학 포럼의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구민교 교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청중 여러분과 함께 가볍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정의문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오늘 제 5차 평화학 포럼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와 유홍림 학장님이 같이 앉아서 대담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의 진행 순서는 먼저 회색지대와 정의담론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담론의 역사와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 사회의 정의 담론 및 한계, 토의정치의 필요성, 그리고 지구적 정의 문제, 향후 정의담론의 전망 등에 대해서 유홍림 학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회색지대속의 정의 담론인데요. 먼저 이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회색지대 속에서 정의 담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홍림 학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오늘 대담 제목이

회색지대 속의 정의담론인데 회색 지대는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오늘 제목의 의미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흥림: 회색지대는 불분명한 현상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일상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회색지대라고 표현한 것은 저와 김범수 교수를 포함한 많은 정치학자들이 정치학개론 첫 장의 주제로 다루는 질문, 즉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세계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정치와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공유되는가는 우리의 행위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정치와 정치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상상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정치행위와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치는 권력 투쟁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은 권력 획득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피지배의 계급관계를 통해 정치를 이해하면 계급구조의 틀 속에서 행동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정치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가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와 판단에 속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회색지대라는 표현에는 정치와 정치세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에 대한 비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이론의 힘에 의존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을 보다 명료하고 간명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화의 유혹 또는 매력에 끌려서 흑백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현실을 재단하면, 복잡한 현실의 특성인 불확실성, 불확정성, 애

매모호함을 힘들게 참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화의 유혹이자 매력입니다. 저는 이러한 단순화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치세계를 회색지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인간의 집합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류가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된 힘의 근원은 집단적 협동체계라고 말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소규모 집단을 넘어서는 협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비결은 자연 상태를 넘어선 큰 단위의 협동을 가능케 하는 신화(신념체계)와 조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적 삶, 즉 정치세계는 오랜 시행착오 속에서의 집단적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선택은 항상 예견된 결과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서로 상반되는 현상들이 공존합니다. 한편으로 두려움과 욕망이 빚어내는 폭력, 우연과 작위가 얽힌 부조리와 부패가 있는가 하면, 정의에 대한 열망, 좋은 삶에 대한 추구, 그리고 사랑과 신뢰 등 긍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세계의 실상을 단순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위해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범수: 사실 저는 처음에 회색지대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사실 요즘 봄이고 그래서 녹색지대 내지는 좀 더 밝은 색이 더 정치를 그리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흑백 논리, 흑과 백으로 명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회색 지대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설

명을 들으니 왜 회색지대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색지대가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흑백논리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니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저희 정치세계라고 하는 것이 흑과 백이 아니라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러한 회색지대 속에서 정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의담론의 역사와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흥림: 많이 알려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에 대한 규정, 즉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역으로 바꾸면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 구절의 다른 수단은 폭력이고 뒤의 다른 수단은 언어 행위입니다. 정치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공적 발언(public speech)입니다. 저는 정치세계는 기본적으로 담론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담론은 매우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상황 속에서 어떤 열망과 필요가 발생할 때, 그것을 집단적 선택이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치언어의 대부분은 일상적인 언어로부터 진화합니다. 일상용어가 정치용어로 전화되고, 그 용어에 정치적 의미가 담기면 정치적 관념이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응축되면 정치적 이상이나 가치가 형성되고, 그 이상과 가치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승화될 때 법과 원칙이 수립됩니다. 정치경험 속에서 발생하고 진화하는 이 모든 정치언어의 요소들이 패키지의 형태로 요약 정리되면 이데올로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행위에 동원되는 모든 언어의 형태들이 정치담론을 구성합니다. 정의도 그러한 정치담론을 구성하는 하나의 개념이자 이상이며, 그리고 법과 원칙의 형태로까지 발전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세계 속에 내재하는 긴장과 갈등,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사상시키고 단순화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현실에 접근을 할 때, 대부분의 정치언어는 생명력을 잃은 정치적 구호나 레토릭으로 전락합니다. 담론의 생태계에서 어떠한 개념, 가치, 이상은 생명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정치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열망과 필요로부터 비롯된 정치언어의 스펙트럼이 서로 괴리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담론 속의 많은 개념과 이상들은 단순화의 매력에 밀려 생명력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정의든, 자유든 우리가 추구하는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담론생태계의 속성과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치담론 속에서 어떻게 정의 개념과 이상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회색지대 속의 정의 담론’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정의 담론의 역사를 보면 서양의 경우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품들에서 정의의 문제, 즉 정의가 인간의 삶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인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정치적 개념으로서 그 이후 담론의 전통을 형성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전쟁에 대한 기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정의를 만든다’(‘Might makes Right’)는 논리, 그리고 전쟁의 상황 속에서 폴리스 내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던 정의가 무참히 소용없어지는 경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 그리고 로마시대 스토아학파로 이어지면서 장구한 자연법 담론전통을 형성하게 됩니다. 힘이 정의라는 현실주의적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의는 신의 이성이라는 보편적 초월성에 근거하며, 현실의 윤리규범과 법질서는 그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자연법 전통은 신=자연=이성에 의해 보편적인 올바른 삶의 기준이 제시된다는 철학적, 신학적 정당화의 전통으로서 중세 스콜라철학 이후까지 계승됩니다. 그런데 근대에 접어들며 모든 정치질서와 규범의 초월적 근원 자체에 대한 회의가 팽배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론이나 정치신학에 의해서 인간의 규범적 삶의 기초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근대 이후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운 삶, 행복한 삶,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삶에 대한 열망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열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결국 근대 이후 현대까지의 규범철학과 정의담론의 큰 줄기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저에게 키워드로 들렸던 부분은 회색지대라고 이야기되는 우리 정치세계 속에서 투키디데스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한다면 정의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의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지배하고 있는 회색지대에서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써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정의 담론에서 더 나아가 현대사회의 정

의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PPT에 보면, 현대 정치사상에서 정의담론과 관련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존 롤스의 정의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 설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흥림: 롤스는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정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재고 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대 이후 윤리적 삶의 문제는 합의 불가능한, 따라서 주관적인 선택의 문제로 환원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사회과학 내에서 정의 담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해, 개인주의와 주관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과 연관된 경제적 자유주의 전통 등의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대의 과학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 개념은 추상적인, 비과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철학사조에서도 분석철학과 실존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규범철학과 정의담론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1971년 출간된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이러한 상황의 반전에 기여했습니다. 『정의론』은 롤스 자신의 경험, 특히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전 중 겪은 원폭 현장의 참상과 전우의 사망 등의 경험은 그의 관심을 신학에서 정치철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미국 정치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반문화 사조 속에서 롤스는 정의의 문제를 평생의 탐구 주제로 삼게 됩니다. 10여년에 걸친 폭넓은 지적 탐구, 본인의 경험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당시 인류가 공유했던 체험에

대한 반추 속에서 『정의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의론』은 학계를 넘어서 공적 담론의 방향을 전환시킨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 즉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구성합니다. 정의 원칙의 도출 방법, 원칙들 간의 관계 등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정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철학의 ‘실천적 전환(practical turn)’을 주도한 롤스는 사회적 균열, 문화적 차이, 정치적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롤스는 ‘현실주의적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를 구성하려 합니다. 롤스는 그의 마지막 저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에서 정치철학의 네 가지 역할을 말합니다. 첫째는 ‘실천적 역할(practical role)’입니다. 홉스나 로크, 몽테스키외나 칸트 등 모든 정치철학자들은 그들이 처한 당시의 갈등과 전쟁 상황, 정치적 불안정과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치철학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어떤 정치철학자도 순수한 호기심에서 이론적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입니다. 제가 앞서 정치와 정치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념을 어떤 의미로 파악하는가, 삶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도와주는 것도 정치철학의 역할입니다. 롤스는 공적인 정치문화 속에 담겨있는 공통된 이해를 명료화시키는 방식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

한 근본적인 관념들의 내용을 정교하게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정치철학의 세 번째 역할은 ‘화해(reconciliation)’입니다. 현실을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파고들면 그 속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고통과 좌절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상한 현실을 보고나면, 우리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치철학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좌절하지 않도록 현실과 이상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과 이상이 아무리 현실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현실 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네 번째 역할은 정치철학은 궁극적으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 네 가지 정치철학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롤스는 옳음(the right)과 좋음(the good), 즉 정의와 행복의 문제를 칸트적 시각에서 구분하면서 사회의 기본구조의 수립과 운영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을 자유주의 규범철학의 주제로 설정합니다. 그는 다원적인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좋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이 적고,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주의 규범이론이 다루어야 할 주제 및 대상은 개인의 주관 영역을 넘어선 사회의 기본구조 구성 및 운영의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학적 추상화 및 개념구성이 방법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롤스는 정치적 구성주의 방식을 통해 근본적 관념들을 명료화하고, 그 관념들 간의 관계를 체계화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해냅니다. 이러한 구성 과정에서 원초적 입장, 무지의 장막, 반성적 평형, 중첩적 합의, 공적 이성 등의 핵심 개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정의관은 이해타산에 근거한 ‘잠정타협’과 구분되는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자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중첩적 합의는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 사이에서 민주시민의 이성인 ‘공적 이성’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적 이성은 시민 전체의 관점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며, 사회의 배경 문화를 구성하는 포괄적 교의들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합니다. 도덕적 능력을 갖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포괄적 교의와 함께 공적 이성에 입각하여 정치적 정의관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중첩적 합의는 도덕성에 근거한 ‘안정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김범수: 저도 롤스에 대해 공부 했습니다만 롤스의 정의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핵심은 회색지대의 관점에서 롤스는 무엇보다 합의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원칙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public reason이라고 하는 공적 이성 그리고 그것의 방식이 중첩적 합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롤스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롤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회색지대의 이러한 혼란이라고 할까요. 불확실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무엇인가 합의 가능하다는 정의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직으로 넘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마도 노직은

롤스의 정의론을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본 학자 중의 한 명이었을 텐데요. 여기 ppt에 학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노직의 관점이 무엇인지, 노직이 롤스의 정의론의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흥림: 아시겠지만 노직은 롤스와 같이 하버드대 철학과에 재직했습니다. 노직 교수는 정치철학 관련해서는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한 권을 저술했고, 이후 여러 비판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응을 하지 않고 논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현대 정의담론에 참여한 정치철학자 중 롤스와 노직 등 대표적인 몇 명만을 추리는 이유는 그들이 이론적으로 가장 정교한 형태로 논의를 전개했고, 그 이론들이 현대 정의담론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직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노직 교수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에서 롤스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롤스는 칸트주의에 근거해서 사회계약론의 틀을 정치적 구성주의로 정교하게 발전시켜 정의론에서 만민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노직은 칸트가 아닌 로크로부터 시작하고, 정치철학의 문제를 훨씬 더 단순한 명제로 환원합니다. 근대 이후 자명하게 인정되는 자기소유권(self-ownership), 즉 개인의 신체와 노동력은 자신의 소유물이며 그 처분권도 자신에게 있다는 명제가 노직 정의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총체적 능력을 외화·연장시켜서 획득한 것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소유권의 절대성을 전제로 모든 정치적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는 매우 논리적인 저서입니다. 어떻게 아나키 상태에서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설득력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의 안전과 소유권을 보장 받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달성되는 국가라는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정부는 여러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직에 따르면 국가는 전쟁과 폭력, 사기와 절도로부터 그 구성원을 보호하고, 계약을 강제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노직의 논리도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형태의 공동체적 삶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국가의 형태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최소국가’라는 것입니다. 노직은 근대 이후 큰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 내 자유지상주의자로서 위치하지만, 소유권과 정의의 문제를 노직만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 학자도 드뭅니다. 노직은 최소국가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정의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다루기 위해 정의에 대한 소유권이론을 전개합니다. 노직은 분배정의와 관련된 논의들이 모두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분배정의 담론은 개인들에게 그들 몫의 재화를 할당하거나 분배하는 중앙 권위체의 존재를 상정하지만, 실제로 개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그들 사이의 거래를 통해 도덕적 권리주장의 대상이 되는 개인소유의 재산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노직은 정의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는 용어보다 ‘소유에 있어서의 정의(justice in holdings)’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최소국

가에서의 정의는 ‘분배’가 아닌 ‘소유의 정당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직의 소유에 대한 정의이론은 재산 소유의 과정과 방식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세 차원에서 정의의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a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a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 ‘교정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a principle of justice in rectification)’에 합당하게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노직이 의존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로크의 설명에 따르면 자연적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는 경우 그 노동의 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초 획득의 정당성은 자연적 대상물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에 의해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유권리의 다른 형태는 소유물의 이전과 관련됩니다. 첫 번째의 원칙에 의해 정당하게 획득된 소유물은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이전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의 결과를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배타적 소유권은 획득과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에 의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두 원칙을 보완하는 원칙이 과거의 획득과 이전에 있어서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교정에 있어서의 정의 원칙’입니다. 노직에 의하면, 소유권리론이 아닌 다른 정의이론들은 소유의 정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소유권리론 이외의 다른 모든 분배정의이론들이 옹호하는 분배형태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특정한 분배형태나 구조를 강제적으로 실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노동의 산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게 됩니다. ‘소유에 있어서의 정의’는 재분배와 배치됩니다. 최소국가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듯이 분배정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유에 있어서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범수: 저도 개인적으로 노직에 대해 공부했는데,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롤스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롤스의 경우에는 equal opportunity를 강조하고 거기서 경쟁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불평등이 발생할 경우, 최소 수혜자를 위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차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직은 이러한 차등의 원칙을 반대한 것이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사례는 ‘Wilt Chamberlain’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윌트 챔버레인이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프로농구 선수였죠. 그런데 윌트 챔버레인이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낸 입장료의 일부분이 윌트 챔버레인에 갔을 때 소유와 이전이라든가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도 없었기 때문에 챔버레인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보다 수백 배 수천 배를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문제를 강조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직은 Libertarian 입장에서, 이러한 소유권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국가개입의 최소화, 야경 국가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장님께서 보내주신 원고에 보면 왈저의 ‘다원적 평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다원적 평등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흥림: 정의 문제 외에도 정의로운 전쟁, 혁명, 민족주의 등 많은 사회 문제에 설득력 있는 비평을 전개해온 왈저(Michael Walzer)가 그의 대표작 『정의와 다원적 평등(*Spheres of Justice*)』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다원주의’와 ‘평등’입니다. 그에 따르면 획일적 평등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가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원주의와 평등에 대한 독특한 옹호론을 전개합니다. 정의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치들의 분배와 관련되며, 정의의 원리인 평등은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기준을 요구합니다. 다원주의와 평등의 문제의식을 결합한 이른바 ‘다원적 평등(complex equality)’은 사회적 가치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각각의 분배 원칙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왈저는 자신의 다원적 평등 개념을 ‘단순 평등’과 대비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평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단순 평등은 우선 기본적 가치의 목록을 규정하고, 이 가치들 간의 전환가능성을 전제로 기본적 가치의 평등한 배분과 최소한의 보장을 지향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비해 왈저는 현대와 같은 다원적 사회에 바람직한 정의와 평등은 획일적 기준에 의해 달성될 수 없으며, ‘지배(domination)’와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원적 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평등에 반대되는 지배는 어느 한 영역에서의 힘 또는 자원이 다른 영역으로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부가 정치나 교육 등 다른

사회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지배에 해당합니다. 왓저는 다른 영역에서의 분배 원리를 훼손시키는 경제 권력의 지배현상에 대응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배는 사회적 가치들이 나름대로의 근거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분배되는 경우에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즉, 각 사회 영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한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왓저가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국적이나 시민권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안전과 복지, 돈과 상품, 공직, 노동, 자유시간, 교육, 혈연과 사랑, 신의 은총, 명예, 정치권력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그는 우선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려 합니다. 왓저는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가치들과 다양한 분배 형태들을 살핍니다. 그는 역사학과 인류학에 의존하는 자신의 방법을 경제학과 심리학에 의존했던 롤스의 방법과 구별합니다. 윤리규범을 ‘발견(discovery)’하거나 ‘구성(construction)’하기보다는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 명료화하려 합니다. 왓저는 보편성을 얻기 위해 ‘동굴을 벗어나는’ 전통적인 철학자와는 달리 동료 시민들에게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의 세계를 명료하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근거로 보다 정의롭고 윤리적인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정치철학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즉, 동료 시민들이 공유하는 세계에 대한 해석이 정의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정의로운 분배원칙은 추상적으로 정식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의미 이해를 통해 명료화되어야 합니다. 왓저가 재화들의 의미와 가치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배정의에 대한 롤스적인 접근법이 가지는 문제점

을 밝히려하기 때문입니다. 왈저는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는 추상화에 근거해서는 무용한 원리의 구성만이 가능할 뿐이므로 구체적 재화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분배정의 이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체적 재화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속에 이미 그 재화에 특수한 분배의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칙들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그 사회 및 공동체의 자기 이해를 돕는 것이 이론가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왈저는 확실성이 아닌 다원성을,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이론적 노력이 민주주의적 실천의 일환임을 역설합니다.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로 규정하는 왈저는 특히 경제 권력의 지배력 확대를 경계하여 제도적인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왈저의 다원주의와 평등에 대한 이해, 특히 다원적 평등의 개념에 담긴 의미는 한국의 현실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성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김범수: 개인적으로 학장님께서 왈저 교수의 정의론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되면 왈저 정의론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사회의 정의 담론, 구체적으로는 롤스의 정의론과 롤스를 비판하는 노직의 정의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자 왈저 교수는 평등 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다양한 원칙이 있을 수 있고 사회마다 특수한 정의의 원칙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샌델 역시 공동체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정의란 무엇인

가)라는 책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학자입니다. 샌텔이 이야기하는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립: 샌텔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말씀하신 대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현상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단지 정치구호 혹은 정당의 이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공적 담론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규범적 가치로서 정치세계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정의는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질서와 관련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관념이며, 현대사회에서 좁은 의미의 정의는 법의 이념으로서 사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일반적으로 분배와 처벌 차원의 정의 관념은 정치와 법질서의 토대로서 정치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법과 정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삶의 규범적 기초입니다. 법은 담론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정의에 대한 열망과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담긴 정의의 규범적 가치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과 접목되어서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의해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며, 기대와 상황에 부합하는 정의 관념의 수립에 의해 정치안정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이 시급할수록 정의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샌텔은 정의의 문제를 통해 도덕담론의 필요성에 대한 전사회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샌텔은 행복, 자유, 미덕 각각을 기준으로 정의의 문제에 접근하는 사상 체계들로서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칸트의 도덕철학,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등을 차례로 논의합니다. 샌텔은 정의를 둘러싼 도덕담론은 좋은 삶과 삶의 목적을 출발점으로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요구, 내러티브를 통한 자아정체성 수립,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연대감, 애국심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샌텔은 비로소 자신이 선호하는 정의에 대한 접근방식을 밝힙니다. 샌텔의 정의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논의는 ‘정의와 공동선’을 결합하는 ‘공동선의 정치’ 구상으로 귀결됩니다. 시민의 윤리적 역량을 중심축으로 삼는 공동선의 정치는 물질적 이해와 개인의 권리 담론에 경도된 현대 정치의 천박함과 공허함을 비판하면서 도덕적 열망의 정치를 지향합니다. 시민의식, 희생, 봉사,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인식,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연대 구축,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샌텔은 오랜 역사를 갖는 공화주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샌텔은 도덕적 열망이 반영된 ‘공동선의 정치’ 구상을 통해 공화주의적 공공철학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동선의 정치 구상에 따라 정의와 공동선을 결합시켜 도덕담론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경우 의견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삶의 형태, 행위와 제도의 목적 등 가치와 의미를 둘러싼 공적 논쟁이 결국 정의로운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영역이 도덕적 갈등 해결의 장이 되어 시민의 가치관 형성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도덕 논쟁이 사회통합의 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어느 정도 합의를 지향한다면, 이성적 합의를 위한 조건과 절차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샌텔이 비판하는 중립성과 대표성의 절차, 추상화된 정의 원리가 다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정의에 대한 상이한 접근 방식들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순환적으로 연계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식은 선택적이기보다는 여러 관점을 동시에 수용하는 다초점적이고 맥락적이며 전체를 둘러보는 시야를 필요로 합니다. 샌델의 열망과는 달리 현대 다원사회에서의 정의 관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 정치와 경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분배와 인정 등의 제도와 관심들이 분화하고 교류하는 양상은 복잡합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각각의 영역은 고유한 정의 관념과 원칙을 자율적으로 형성해가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은 영역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상호협력을 위한 통합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공간의 맥락에서 어떤 정의원칙이 타당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 선택이 아닌 기준들 간의 절충과 조화를 가능케 하는 ‘토의정치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저도 그 책을 재미있게 봤는데요. 학장님께서 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 시장에서 개인들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유지상주의도 비판하고 있고 롤스의 정의론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도덕적 열망이 공동체 선을 향한 공동체 정치 구상을 했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ppt에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포괄적 접근과 균형적인 다양

한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기준 간에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토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토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 뒷부분에 이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이런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흥림: 알저 교수는 규범의 수립 방식으로 발견과 구성, 그리고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현대적 상황에서는 정의를 포함한 모든 규범은 토의 과정을 통해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세계는 자유, 평등, 정의, 복지, 유대, 개인성, 집단정체성, 민주적 정당성, 시민윤리, 리더십 등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열망과 가치들을 내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들의 완전한 조화와 실현을 보장하는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정치는 상충하는 가치와 요구들 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담론은 ‘균형의 정치’에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정치사회는 가치 및 목표들 간의 절충과 균형을 민주정치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광의의 정부와 시민을 매개하고 환류형태로 결합하려는 노력이 ‘토의정치(deliberative politics)’입니다. 물론 토의정치가 권력 및 이익갈등의 현실을 반영하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와 선거캠페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포럼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어느 정도의 상호이해와 합의의 가능성이 열리면, 적대적 갈등과 균열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충과 균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상황 가변적이며, 이러한 불확정성에 적극 대처해나가는 시민의 집단적 역량이 토의정치의 기반입니다. 토의정치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현실주의(utopian realism)의 한 표현입니다. 토의정치는 시민사회의 공론형성으로부터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에 이르는 여러 층위의 절차와 제도로 구성됩니다. 토의정치는 대화와 근거제시(reason-giving)를 통해 참여자의 사고범위를 확장하고 변화시킴으로써 공동선에 합당한 입법 및 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토의정치는 ‘참여로서의 토의(deliberation as participation)’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하여 법과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토의정치는 ‘토의의 매개적 기능(deliberative mediation)’을 극대화함으로써 갈등의 양상과 정도를 어느 정도 순화하려는 노력입니다. 현재 토의정치의 실험들—예컨대 시민배심제, 시민의회, 공론조사 등—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들의 수가 늘어나고 서로 연결되어 군도를 형성한다면, 정치적 삶의 지형이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형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소외와 대표의 위기라는 현대정치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토의정치는 시민사회 전반과 넓은 의미의 정부 영역을 매개하려는 민주적 혁신의 노력으로서 정의담론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범수: 예, 이렇게 토의정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 해주신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회색지대라고 하는 정치의 현실 세계에서 뭔가 방향을 정해주는 정의 담론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정의 담론은 롤스부터 시작해서 노직, 왈저, 마이클 샌델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관점, 다양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거기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토의(deliberation)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 지점에서 한국사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학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다양한 정의담론과 그리고 이 토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사회가 과연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토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정의 담론을 찾아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의 담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시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홍림: 최근 정의와 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공정의 사례들, 특히 청년층의 공정을 둘러싼 불만을 증폭시킨 사례들이 있는데, 분명한 위법이나 탈법 행위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만의 근원에는 법을 우회할 수 있고, 범법을 저질렀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의담론의 출발단계에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트라시마코스와 칼리클레스의 주장, 즉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참주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장이 널리 인정된다면, 그것은 사회의 근본적인 불안정의 씨앗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법의 위반, 회피, 편법,

그리고 왈저 교수가 우려하는 지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팽배할 때, 정치권이나 언론 등의 공론장에서 정의의 문제가 진정한 담론의 형태로 전개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정책들과 관련해서 정의의 가치와 이상이 ‘사회적 상상’으로 승화되어 생명력을 발휘하는 담론의 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의 사례들이 신문지상에 잠시 등장하고, 그에 대해 잠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의미 있는 정의담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있어 독점과 편법 등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면, 법과 정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삶의 규범적 기초인 정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공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의 개념은 정치 구호가 아닌 진지한 공적 담론의 주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정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복잡적이며 불확정적인 성격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지만, 비과학적이고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여전히 질서 유지와 사회 통합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김범수: 아마도 한국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은 조금 뒤에 학장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질문들이 올라오면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논의의 방향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일국 차원에서 특정한 사회 내에서의 정의 담론을 살펴봤는데요. 시야를 전지구적 차원으로 넓혀서 지구적 정의(Global justice)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장님께서 주신 원고를 보면, 글로벌 저스티스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사회 내에서도 정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러한 지구적 정의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이러한 지구적 정의의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해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아마도 국내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도 롤스부터 시작했는데, 지구적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롤스의 만민법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롤스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흥림: 롤스의 『정의론』에 의해 1970년대 초반부터 현대의 정의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지구적 정의’가 공적 담론의 장에서 논의된 것은 대략 20여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롤스의 『만민법(The Law of Peoples)』이 기폭제가 되기는 했지만, 점점 심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제적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지구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정의담론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는 전쟁과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의 목적, 과정, 전후 처리에서의 정의 문제를 다루는 ‘정의로운 전쟁’ 담론을 넘어 주제가 확장된 것은 지구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양극화, 점점 악화되고 있는 환경과 자연자원 문제, 팬데믹의 위기 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 내의(domestic), 국가들 간의(international), 그리고 지구적(global) 정의가 구분되지만, 서로 중첩되기도 합니다. 지구적 정의 문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행위자와 조직의 등장과도 관련되며, 한 국가 내에서의 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주제입니다. 지구적 정의담론에 미친 롤스의 『만민법』의 영향은 매우 큼니다. 한 국가 내에

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보편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롤스의 노력은 국제적인 보편 규범인 '만민법'의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만민법과 구별되는 국제법은 실효적인 제재수단들을 결여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의 실정 법질서입니다. 이에 비해 만민법은 국제법으로 확장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자유주의적 정의의 관념들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올바름, 정의 그리고 공동선과 같은 정치적 관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민법은 국제법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과 원리들을 제공합니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국가들 사이에 합의될 수 있는 만민법은 위계적 사회의 대표자들에 의해서도 채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계적 사회들이 질서정연한 사회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제도적 차원에서 법체계와 대표기구가 확립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만민법은 위계적 사회에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의 과정에서 원초적 입장은 자유주의적 사회들 간의 합의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각 국가의 대표자들은 상호 동등한 조건 하에 놓이며, 비자유주의적인 사회의 대표들도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롤스의 논점은 한 정치사회 내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도출되는 것과 정의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자유주의적 관념으로부터 만민법이 도출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합당한 구성의 절차라는 근본적 이념을 사용하여 상호 공정한 조건을 공유하는 합리적 행위자들이 각각의 주제, 즉 개별적인 국내의 기본구조이든 또는 공통된 만민법이든, 그 주제들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모두

의 경우 그들이 원초적 입장의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동기는 평화적인 질서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김범수: 사실 이 롤스의 만민법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롤스의 만민법은 학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나와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차용한 부분이 있고, 롤스도 만민법에서 칸트를 언급하고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이 칸트에서 유래한다고 말이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쟁 중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로티우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로티우스라든가 칸트적인 전통에서, 즉 흡수적인 전통과 다른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 롤스의 만민법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또는 국가들 간에 정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아마도 롤스의 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롤스의 만민법 이외에 여러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원고에 적어주셨는데요. 다양한 범세계주의(cosmopolitanism)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기후변화 문제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한 이슈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홍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구적 정의의 주제들을 보면, 분배(distribution)의 문제가 여전히 정의의 핵심 문제입니다. 특히 자연자원을 포함한 경제적 재화의 재분배 문제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양극화의 문제와 관련되고, 지구적 차원에서 빈곤의 문제가 악화될 때 보다 풍요로운 국가와 국민들의 의무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나아가 인권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문제, 그리고 전쟁과 테러리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젠더 정의의 문제도 제기되고, 최근 쟁점으로 부상되는 이민과 난민의 문제, 즉 국경 통제와 개방의 정도,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 등은 모두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그리고 다음 평화화 포럼의 주제로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건강의 문제도 한 국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며, 국가들 간의 협력체계, 유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 국제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적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다뤄져야 할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적 이슈들은 국내 정치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중첩되어 정의담론의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든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현실주의적 입장이 있고, 지구적 정의라는 보편 규범의 수립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특수주의(particularism)나 민족주의(nationalism)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의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정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롤스의 입장은 국제사회론의 전통에 속하고, 이상주의적인 범세계주의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경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사실 말씀해 주신대로 범세계주의, 현실주의, 국제사회론 등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정의의 문제를 얼마만큼 추구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

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의 담론, 지구적 차원에서의 정의담론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러한 정의 담론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정의 담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흥림: 정의담론은 현대사회의 변화 방향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정의담론의 방향과 주제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변동에 대한 예측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혁명 등의 키워드가 담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포스트-휴먼 시대가 열리고,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리주의의 창시자이자 정치개혁가인 벤담(Jeremy Bentham)이 구상했던 기획의 현대적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벤담은 기존의 비합리적 정치를 대체하는 합리주의적 프로젝트를 추구했습니다. 근대 이후의 정치세계는 ‘신념의 정치(the politics of faith)’와 ‘회의의 정치(the politics of scepticism)’ 사이의 긴장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담은 정치의 기능을 ‘계산(calculation)’과 ‘제재(sanction)’로 단순화합니다. 정부는 데이터 수합과 분석을 통해 최대다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제재 수단을 동원해 그 정책을 실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합리적 입법과 정책수립이 가능해지는 세계는 유토피아일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집단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간과 삶의 목적에 대

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른바 ‘정치적인 것의 귀환(The Return of the Political)’을 통해 디스토피아의 도래를 막기 위한 집단적 선택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선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있고, 공적인 판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론의 장을 활성화하여 토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정의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무한경쟁 속에서의 생존(survival)과는 다른 차원의 관념으로서 지속되어야 할 가치 및 삶의 방식의 문제를 포함하는 규범적 개념이며, 경제와 환경의 영역을 넘어 생활세계의 다양성 보전, 사회정의와 통합, 정치제도화의 요구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의담론의 전망과 관련해서 현대사회의 두 기반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긴장과 타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는 성장률 저하, 재정 적자, 부채 증가 등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세대의 자원을 미리 당겨써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민주적 요구와 자본의 논리 사이의 또 다른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정치적 불안정과 정치에 대한 회의가 고조될 것입니다. 그 연장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도 앞으로의 정의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김범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의 공정담론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정의담론의 방향은 무엇

인지요?

유흥립: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의에 대한 논의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한 공통감각(common sense of justice)’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화 이후 30여년의 과정을 돌아보면 한국 정치의 키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민주화와 더불어 과거의 부정과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열망이 고조되었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공약이 항상 등장했고, 실제로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해왔지만, 여전히 사회적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의해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며, 기대와 상황에 부합하는 정의 관념의 수립에 의해 정치안정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정의(평등)에 대한 관념의 차이는 불안정과 내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 위기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의 관념의 와해와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정의담론을 활성화하여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인식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활동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광장의 정치’만으로는 정의담론의 생명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를 매개하는 토의정치의 영역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이한 정책 제안들 간의 타협과 절충은 시민사회 속에 정의에 대한 공통감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해집

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와 선거에서의 다수결에 의해 정의 문제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은 또 다른 불안정의 씨앗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균열이 심각한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속에 뿌리를 둔 적대적 반감의 잔재가 있습니다. 물론 이익 갈등과 의견 대립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정치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식민지 경험, 분단과 전쟁,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른 사회 균열과 갈등은 한국 정치지형을 양극화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분상으로 공동체와 공동선을 강조하고 여러 형태의 통합을 시도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배제와 서열화를 내포하는 사이버 통합과 양극화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이러한 적대적 반감의 유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갈등과 균열을 넘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는 정의담론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흑백논리로부터 벗어나 회색지대의 균형 감각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의담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범수: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대적 반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열린 정의 담론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시간 제약 상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 중 두 질문만 다루고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재분배에서 인정으로(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라는 논문에서 재분배 문제가 중요하지만 인정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인정의 문제를 정의담론이 어떻게 포괄할 수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질문해주셨습니다.

유홍림 : 프레이저(Nancy Fraser)와 호네트(Axel Honneth)는 재분배와 인정의 우선성을 둘러싸고 논쟁을 전개했습니다. 인정의 문제는 다문화주의, 이주노동의 문제들과 복합적 연계되어 있고, 국가별로 상황과 맥락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재분배와 인정의 논쟁에서 양쪽이 연결되는 지점에 주목합니다. 인정의 문제는 문화적, 인종적 차별성과 획일주의적 동질화에 대한 저항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민권 및 복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재분배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 학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의론을 말씀해주셨는데 롤스, 월저, 마이클 샌달이 각각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홍림 : 저는 한국사회에서 정의문제와 관련하여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 다양한 가치들이 상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를 전망할 때 헨더슨(Gregory Henderson)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가 떠오릅니다. 한국 정치의 특징은 하나의 정점을 향해가는 소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많은 갈등은 획일화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다원화되는 사회를 맞이할 앞으로의 세대는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 다원적인 가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다원

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현실에 대한 보다 경험적인 이해, 즉 ‘다원주의적 현실감각’이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제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푸르른 것은 저 언덕 위에 있는 생명의 나무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실은 회색지대입니다만 정의담론이라는 것이 생명의 나무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는 가라는 생각합니다. 다음달 제6차 평화학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조천호 교수님과 다룰 예정이고, 이후 제7차 포럼에서는 글로벌 헬스를 다루는 발표를 김선영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유홍림 학장님의 발표와 긴 시간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차 평화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